"전쟁은 없다"는 아베, 日국민도 안 믿는다

집단자위권 안보법률 제·개정안…반대 55% 찬성 25%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 없다는 주장…73% 납득 못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강행처리하려 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일본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대해 반대가 55%, 찬성이 25%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의 직전 조사에 비해 반대는 3% 포인트 늘었고, 찬성은 4% 포인트 하락했다.

안보법제 제·개정안에 담긴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가 44%로, 찬성(41%)보다 많았다.

'안보법제 정비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전혀 없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로, '납득된다'(15%)는 응답을 압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이 23~2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안보법률 제·개정에 대해 반대가 53%로 찬성(34%)을 웃돌았다. 또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54%, 찬성 32%로 나타났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에 대해 아베 정권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여론의 신중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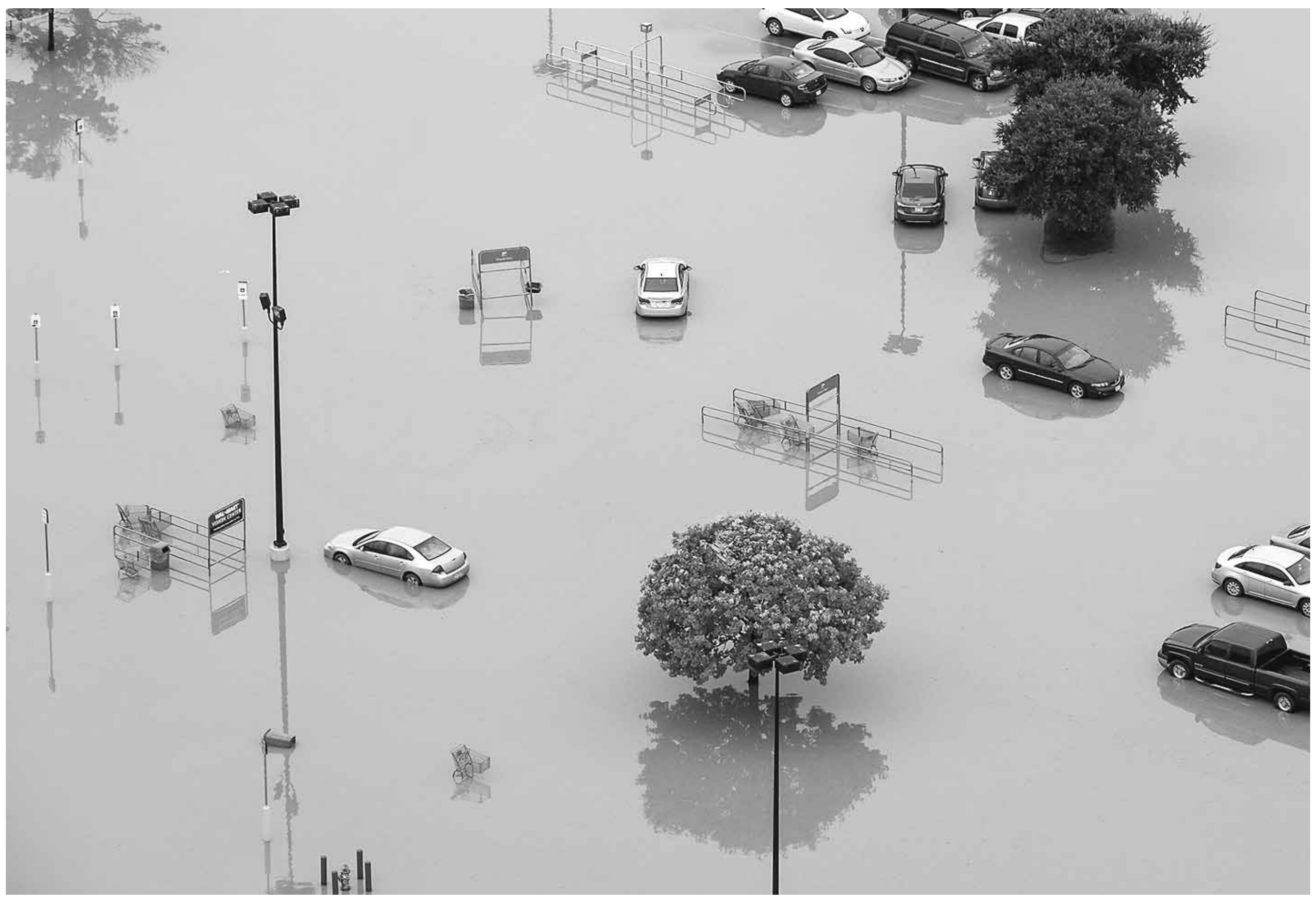
또 닛케이 조사에서 오키나와(沖縄)현의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현내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계획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8월께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반성' 등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7%,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8%로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이니치 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달 미국 의회 연설 때 2차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평가한다(가치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응답이 58%로 '평가하지 않는다(27%)'는 답보다 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 닛케이 조사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오사카 재편구상에 대한 지난 17일 주민투표가 부결된 직후 연말 정계 은퇴를 천명한 데 대해 '오사카 시장을 계속 하기 바란다(16%)'거나, '국회의원이 되기 바란다(34%)'는 등 정치를 계속하길 원하는 이들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닛케이 조사에서 50%, 마이니치 조사에서 45%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물에 잠긴 美 텍사스

미국 중서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산마르코스 강이 범람해 인근 월마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중국, 일본군 위안부 기록 국가 기록문헌 유산 승격

반인권적 침탈행위 내용 후대 위한 증언으로 보전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관련 문서가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됐다.

25일 중국 현대쾌보(現代快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기록국은 최근 29건의 문서·문헌을 제4차 중국 기록문헌 유산으로 공포하면서 이 중 중앙기록관 등 9개 기록관이 함께 신청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서'를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시켰다.

이는 일본군의 반인권적 침탈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후대를 위한 증언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우익세력이 위안부의 역사적 진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9개 기록관이 전국적인 힘을 모아 일본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샤베이(夏倍) 난징기록관 연구원은 "일본당국이 침략의 와중에서 각국 부녀자를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로 충당했고 소위 '위안부' 제도를 제정했다"며 "1937년 12월 일본 화중방면군 사령관 마쓰이 이시네(松井石根)가 위안부 제도를 난징에서 실시하도록 명령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서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상반기까지 일본군이 난징(南京)을 강점하고 사유재산을 징발해 사용한 데 따른 민원 및 재산피해 기록 중 위안부에 관한 내용만 골라낸 것이다.

10권 이상의 기록자료는 예컨대 난징 4-129번지 건물이 전쟁기간 일본군의 위안소로 사용된 점, 일본군의 패배 직전 위안소가 해산된 점, 위안소 관리를 위탁받아 실행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의 건물이 위안소로 사용되면서 받은 재산상의 손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가정집과 여관을 점거해 위안소로 사용한 정황,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등 시민들의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중앙기록관·난징기록관·헤이룽장(黑龍江)기록관 등 9개 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이 문서를 기록문헌 유산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해 뜻을 이루었다.

위안부 문서는 2차대전 종전 후 당시 중화민국 난징정부가 각 기관의 보고를 수합하고 여기저기 분산된 기록을 종합해 작성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위안부 강제동원을 소재로 하는 영화 '다이한'(大寒)이 제작 발표되는 등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관련 주제들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작년 12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 시민모임'과 김선현 차의과대학 교수가 소장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1065점을 국가지정 기록물로 추가 지정했다. /연합뉴스

평등의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62%

세계 첫 국민투표로 통과

아일랜드가 23일(현지시간)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아일랜드 선거관리 당국은 전날 실시된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결과, 찬성투표 비율이 62.1%로 37.9%인 반대투표 비율을 웃돌았다고 발표했다고 국영 RTE 방송이 전했다.

국민투표는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헌법을 고칠지를 물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많은데도 이번 아일랜드 국민투표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8개국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과거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동성결혼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 있지만 부결됐다. 이후 슬로베니아는 지난 3월 의회 입법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수도 더블린에 있는 성에서는 2000여 명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해진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했다. 엔다 케니 총리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평등에 대한 큰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아일랜드는 불과 22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범죄였던 곳이었다. 당시 의회 입법으로 동성애를 범죄시하지 않았지만 국민투표 결과는 3분의 1만이 범죄화하지 않는데 찬성했다.

여기엔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 대부분은 자신을 가톨릭 교도라고 여긴다. 이런 까닭에 아일랜드는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1990년대 초반 일련의 아동 성추행 의혹들을 겪으면서 위상이 떨어졌다. 더불어 아일랜드 사회에 변화의 흐름이 이어졌다. 2000년 게이의 술집 및 클럽 출입을 허용하고 은행들과 집주인들이 이들에 대한대출과 월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막는 조치를 했다.

2010년엔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결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1천을 넘는 동성 커플이 시민결합으로 등록했다. '시민결합'과 동성결혼 합법화의 차이는 헌법적 보호를 받는지 여부다. 시민결합이 갖는 법적 보호는 정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의 정의를 수정한 헌법의 보호를 받는 동성결혼은 개헌에 의해서만 지위가 바뀔 수 있다. 이어 2013년 중도성향의 집권 통일아일랜드당 정부가 헌법검토위원회를 꾸려 동성결혼을 포함한 개헌 사항들을 검토했고 위원회가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를 권고함으로써 국민투표의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설상가상 네팔…산사태 발생 수천명 대피

카트만두 북서쪽 140㎞ 지진 여파로 곳곳 무너져

한 달 전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수천 명이 피난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140㎞ 떨어진 람체 마을에서 전날 밤 산사태가 발생해 칼리간다키 강이 막히면서 길이 2㎞가량의 '호수'가 만들어졌다.

지방 정부 관계자는 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물이 넘쳐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근 주민 수천 명을 고지대로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군경이 파견돼 강 상태를 살피며 주민을 돕고 있다.

네팔에서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대지진과 이달 12일 이어진 여진으로 8700여 명이 숨지고 1만 6000여 명이 다쳤으며, 그 여파로 아직 수많은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